

‘복지 천국’ 스웨덴이 ‘가짜뉴스 천국’된 사연은?

스웨덴의 가짜뉴스 원인과 대책

김민주 스웨덴 룬드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석사과정

들어가며

지난해 옥스포드 인터넷 연구소는 “유럽에서 가짜뉴스¹⁾ 를 가장 많이 공유하는 나라는 스웨덴²⁾”이라는 결과를 발표했다. 2018년 스웨덴 총선을 앞두고 공유된 약 270,000개의 스웨덴 트위터 글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트위터를 통해 공유된 뉴스 중 가짜뉴스의 비율이 약 22%였다고 한다. 이 비율은 전세계 가짜뉴스 공유 비율 중 미국 다음으로 높은 수치로, 유럽권에서는 가장 높게 나타났다(Hedman et al., 2018). 스웨덴은 평균 언론자유지수와 부패인식지수(CPI)에서 상위권을 유지하는 청렴한 나라로 익히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이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다(국민권익위원회, 2017; 언론중재위원회, 2018).

수많은 매체를 통한 정보가 넘치는 시대에서 가짜뉴스는 스웨덴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문제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가 스웨덴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짧은 기간 동안 집중

1) “가짜뉴스란 의도적으로 과장된 정보나 허위정보를 가진 기사 형태의 스토리를 말한다. 주로 정치적인 목적이나 정보의 혼란, 사기, 경제적 수익(인터넷 기사나 SNS 등의 경우에는 조회수를 늘리기 위한 미끼용) 등을 목적으로 한다” (The Norwegian Media Authority, 2017; Lundgren et al., 2018 재인용).

2) 단, 이 수치는 2018년 8월 스웨덴 총선을 앞두고 10일 동안 진행된 결과라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

적으로 성행하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이하에서는 스웨덴에서 가짜뉴스가 성행하게 된 배경과 이에 대해 스웨덴 사회가 제시한 장단기 대응책, 가짜뉴스 예방에 실패한 이유, 그리고 스웨덴의 사례가 우리사회에 주는 시사점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1. 스웨덴에서 가짜뉴스가 성행하게 된 배경

스웨덴에 가짜뉴스가 활발히 유통된 데는 2015년에 불거진 난민문제가 큰 영향을 미쳤다. 스웨덴은 유럽 국가들 중에서 자국민 인구대비 가장 많은 난민을 수용하는 나라다. 인구가 약 1천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친(親)난민정책을 펼치면서 2014년부터 2015년 사이에 만 16만 명이 넘는 난민을 수용했기 때문이다(옥기원, 2018).

하지만 갑작스럽게 많은 난민을 수용한 나머지 예상치 못했던 문제에 봉착했다. 난민 범죄와 테러 위협이 증가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과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결국 스웨덴 총리 스테판 뢰벤은 2015년 11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스웨덴이 그동안 너무 나이브(naive)했다”고 발표하며, 공공질서의 확립과 치안을 이유로 친난민정책에 대한 입장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다(Ericsson, 2018; European Commission, 2015).

엮힌 데 덮친 격으로 지난해 우즈베키스탄 출신 남성이 망명을 거부당했다는 이유로 트럭을 타고 스톡홀름 중심가로 돌진해 4명의 시민이 목숨을 잃게 된 테러사건이 발생하자, 난민에 대한 반감은 더 높아졌다(옥기원, 2018). 네오 나치 운동에 뿌리를 두고 있는 극우정당인 스웨덴민주당은 이 틈을 타서 정치선전을 하기 시작했다. 난민 정착 비용으로 세금이 사용되어 스웨덴의 복지 시스템이 위태롭다는 등의 주장으로 시민들을 선동하자 범죄, 교육 등 사회 모든 영역의 문제가 난민 탓이라고 생각하는 극우정당 지지자가 늘어났다(김덕식, 2018).

이때 가짜뉴스는 이러한 반(反)난민정서를 고조시키는 증폭제 역할을 하여 스웨덴 정부가 이민자 정착비용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빌렸다가, 머지않아 무슬림이 스웨덴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등의 허위정보가 떠돌게 되었다. 가짜뉴스의 40%가 스웨덴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반난민주의, 반이슬람주의를 조장하는 글이었다는 조사 결과가 있을 정도였다(Regeringskansliet, 2017b; “Surge in fake Twitter accounts”, 2018).

스테판 뢰벤 총리는 러시아가 사회 분열을 목적으로 스웨덴에 허위정보를 퍼뜨린 것이라며 가짜뉴스의 책임을 외부로 돌렸지만, 가장 많이 공유된 상위 10개 가짜뉴스 중 8개가 스웨덴발(發) 뉴스였다는 점과 2018년 총선에서 스웨덴민주당이 이전 총선에 비해 약 5%정도 약진했다는 점을 보아 스웨덴 사회도 그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어 보인다(김덕식, 2018; “Surge in fake Twitter accounts”, 2018).

II. 가짜뉴스에 대한 단기 대응책

사실 스웨덴 정부는 총선을 앞두고 가짜뉴스가 특정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유통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스웨덴보다 앞서 선거를 치른 미국, 프랑스 등이 소셜미디어에 퍼진 허위정보들로 인해 이미 한차례 홍역을 치른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에 스웨덴도 가짜뉴스의 위협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해 국가, 언론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예방책을 마련하는데 힘썼다.

1. 국가차원에서의 대응책

먼저 정부는 산하기관인 스웨덴 민간 비상국(Swedish Civil Contingencies Agency)과 스웨덴 국립미디어위원회(Swedish Media Council)를 앞장세워 6,000명의 공무원에게 허위정보 판별 교육 훈련을 시키고, 청소년들을 위한 400만 개의 허위정보 판별법 교육자료를 배포했다. 스웨덴 군(The Swedish Armed Forces)은 사이버 공격 대응 강화를 위해 방위 조약 기금을 투자했으며, 페이스북의 도움을 받아 선거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가짜뉴스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페이스북 핫라인을 설치하는 등 정부 각 부처가 다양한 대응책을 준비했다. 스테판 뢰벤 총리는 스웨덴 주요 일간지 다겐스 다흐테르(Dagens Nyheter)를 통해 정부의 여러 가지 대응책을 국민들과 상세히 공유함으로써 허위정보에 특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Brattberg & Maurer, 2018; Regeringskansliet, 2017b).

한편으로는 법을 강화해 가짜뉴스를 규제하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정부는 프랑스처럼 법원에서 뉴스의 진위 여부를 평가해 가짜뉴스의 유통을 규제해야 한다는 법 개정안(Revised





Fundamental Laws for the Media(2017/18:49), 2017)을 의회에 제출했지만, 전원 반대로 반려되고 말았다. 의회에서도 가짜뉴스의 심각성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지만, 법 개정 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위험이 있어 민주주의의 가치에 훼손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즉, 법이 오남용되었을 경우 법원에서 행하는 뉴스의 심의 및 검열이 지나칠 수 있다는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Eriksson, 2018).

법무부 장관인 모건 요한슨(Morgan Johansson, 2018; Eriksson, 2018 재인용)은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법을 개정할 시 생길 수 있는 규제 경계의 모호성” 또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프랑스처럼 법을 개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기독교민주당의 투베 스킨베리(Tuve Skånberg, 2018; Eriksson, 2018 재인용)도 “현재로서는 법 개정에 대하여 상당히 조심스럽고 보수적인 입장”이라며 법 개정 앞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의견을 더했다.

스웨덴 의회에서 이토록 수호하고자 하는 ‘표현의 자유’는 스웨덴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역사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스웨덴은 약 250년 전 세계 최초로 출판언론자유법(Freedom of Press Act)을 도입했다. 언론을 검열로부터 자유롭게 함으로써 언론의 감시기능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 것이다. 스웨덴의 이러한 혁신적인 결정은 민주주의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의 기반을 다진 것으로, 추후 120개국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민주주의 역사에 선구자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Carlsson & Weibull, 2018; Regeringskansliet, 2016). 이 때문에 의회는 위헌의 위험성이 높은 공적인 규제를 먼저 도입하기보다는 언론의 자율규제를 포함한 다양한 해결책을 선행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주축인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지키고자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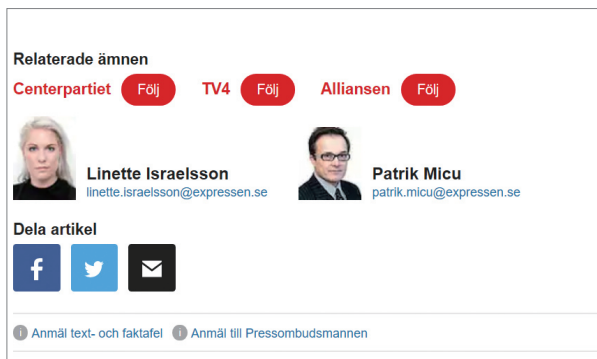
2. 언론차원에서의 대응책

언론에서는 허위정보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주요 언론사(DN, SR, SVT, SvD, KIT)가 협력하여 손쉽게 팩트체크를 할 수 있는 사이트(Faktiskt.se³⁾)를 만들었다. 이웃나라 노르웨이에서 주요 언론사(Norwegian Dagbladet, VG and NRK)끼리 힘을 합쳐 뉴스의 타당성을 체크할 수 있는 무료 사이트(Faktisk.no)를 만들었는데, 이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Lundgren et al, 2018). 물론 이미 2014년에 메트로 신문사가 허위정보 판별을 도와주는 사이트(Viralgranskaren.se)를 만들었으나, 총선 캠페인 기간 동안 주요 언론사들이 가짜뉴스 타도를 위해 협력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Bjerregård, Jensen & Wadbring, 2017).

필요하다면 민간과의 협력도 서슴지 않았다. 룬드대, 스톡홀름대, 쇠테르퇴른대 학생들이 힘을 모아 '실시간' 팩트체크 시스템인 2018 스웨덴 국제팝업뉴스룸(The international pop-up newsroom in Sweden September 2018)이라는 혁신적인 장치를 개발했는데, 이에 저널리스트 100명이 솔루션 개발에 참여해 허위정보 방지 시스템 발전에 힘을 보탰다(Bell, 2018; Mattsson & Parthasarathi, 2018).

화제성과 속도보다는 뉴스의 가치를 높여 가짜뉴스와의 차별성을 두기도 했다. 스웨덴 일간지에서는 기자의 의견(분석)에 주석을 달아 팩트와 명확히 구분지음으로써 기사의 투명성을 높였다. 또 다른 타블로이드신문인 익스프레센은 기사 하단에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을 수 있는 2개의 링크를 삽입했다(〈그림 1〉 참조). 링크 중 하나는 기사의 잘못된 점을 지적할 수 있도록 했고, 다른 하나는

〈그림 1〉 익스프레센 기사 하단에 삽입된 2개의 링크 (Expressen, 2019)



한 과정을 통해 기자 스스로가 윤리적인 취재를 했는지 돌아보고 더욱 깐깐하게 자기검열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처럼 스웨덴 언론이 다방면으로 허위정보 규제에 앞서는 것은 언론인의 자부심과 윤리식으로부터 비롯된다. 스웨덴 언론은 20세기 초부터 자발적으로 언론평의회(Press Council)와 프레

3) 페이스북과의 협력을 위해서는 IFCN이라는 네트워크 멤버가 되어야 하는데 그 과정에 문제가 있어 현재는 이용이 불가하다. 다만, 각 신문 사별로 팩트체크를 할 수 있는 사이트를 따로 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링크에서 확인 가능하다(Kihlström, 2018).



스 옴부즈만(Press Ombudsman)의 감독 아래 미디어 윤리규정을 만들어 시행해왔다. 스웨덴 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가 꽤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자칫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로 번질 수 있는 위험성을 스스로 줄이고자 한 것이다. 표현의 자유에 따르는 결과에 책임감을 느끼고 자기검열을 통해 보도에 신중을 가하겠다는 이 윤리의식은 현재까지도 이어져, 주요 언론사들은 모두 이 규정을 따른다. 그래서 스웨덴은 다른 나라에 비해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이 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낸 보도 때문에 발생한 명예훼손 피해가 적다. 혹, 이러한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프레스 옴부즈만을 통해 문제제기를 하면 기사를 정정하거나 반론보도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다. 또한, 저널리즘 윤리규정에 어긋나는 사안은 우리나라의 언론중재위원회와 성격이 유사한 스웨덴 언론위원회(Pressens Opinionsnämnd)에 넘길 수 있도록 하여, 언론자유 의 오남용을 막고자 했다(언론중재위원회, 2018; Carlsson, & Weibull, 2018). 스웨덴 언론이 국민 절반 이상(64%)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2018년 국경없는기자회가 발표한 언론자유지수 2위에 오른 비결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Harrie, 2018a; Reporters without borders for Freedom of Information, 2018).

III. 가짜뉴스 예방에 실패한 이유

스웨덴 사회가 가짜뉴스의 유통 및 확산을 막기 위하여 다방면으로 예방책을 마련했지만, 끝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로는 가짜뉴스를 감지하는 시스템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팩트체크 기능이 있는 사이트들은 대부분 텍스트를 기반으로 타당성 여부를 판별한다. 하지만 그림, 비디오 등의 형태로 유포되는 가짜뉴스의 수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텍스트가 아닌 형태로 유포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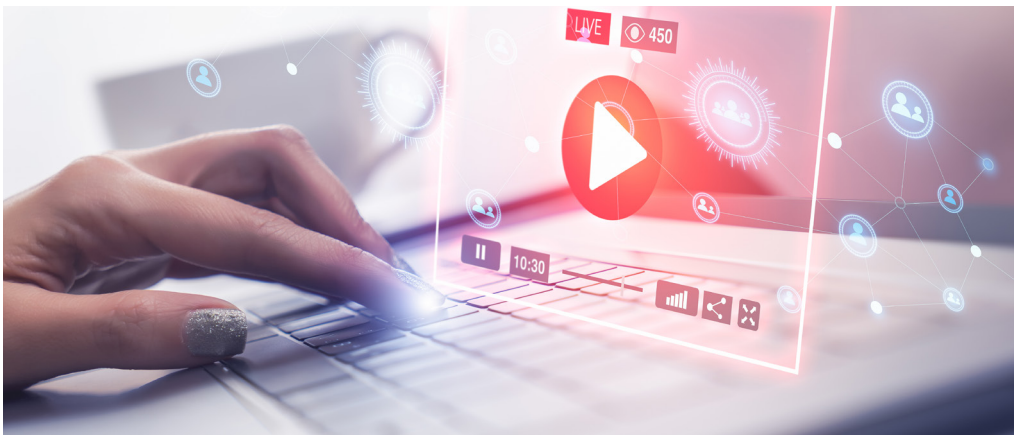
기가 어려웠다.

둘째로는 가짜뉴스의 내용이 100% 거짓이 아니어서 사실상 이를 판별해 내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짜뉴스의 대부분이 사실을 기반으로 특정 부분만 부각시키거나, 그럴듯하게 내용을 바꿔서 유통시키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구분하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Bjerregård et al., 2017).

스웨덴 성범죄가 '난민 때문에' 약 1,400% 급증했다는 가짜뉴스를 예로 들어보자. 통계상 스웨덴의 강간범죄 수가 최근 들어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강간에 대한 정의가 점점 광범위해졌기 때문이지 난민 때문에 늘어난 것은 아니었다. 국가 차원에서 강간 범죄를 적극적으로 신고하도록 장려했다는 점도 한몫을 했다. 강간범죄 건수를 세는 방식 또한 다른 나라와 다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범죄율이 높다는 등의 해석은 삼가야 한다는 것이 스웨덴 정부의 주장이다. 한 여성이 남편에게 1년 동안 매일 밤 강간을 당했다고 신고했을 경우, 다른 국가에서는 이를 1건의 강간 사건으로 보지만 스웨덴에서는 365건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통계자료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특정 부분만 부각시켜 정보를 유통시켰을 경우, 더욱이 이 정보가 뉴스형태를 띠고 있다면 사실상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허위인지 판별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정아연, 2018; Regeringskansliet, 2017a).

IV. 가짜뉴스 방지를 위한 장기 대응책

총선은 끝났지만 가짜뉴스와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가짜뉴스는 총선 기간이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사회 구성원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스웨덴은 총선이라는 단기전에서 가짜뉴



〈그림 2〉 스웨덴 국립미디어 위원회(Statens medieråd, 2018)가 배포한 유튜브 자녀 교육 가이드



스의 확산을 막는 것은 실패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이내 장기전 대비로 눈길을 돌렸다. 일시적인 해결책보다는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을 목표로 가짜뉴스를 줄여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스웨덴 정부는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Media and Information Literacy, 이하 MIL이라고 한다) 교육을 우선 과제로 삼고, MIL을 교육과정에 편입시켰다. 어릴 때부터 허위정보나 선전 등을 판별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안목을 기를 수 있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특히 기자들을 학교수업에 초청해 가짜뉴스

에 대한 기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소년들에게 직접 전달해야 한다거나, 특정 인종이나 성별을 겨냥한 편파적인 발언이 가짜뉴스의 근원이 될 수 있음을 가르쳐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스웨덴 국립미디어위원회(Swedish Media Council)는 이에 발맞춰 공식사이트에 허위정보 판별법, 소셜미디어(유튜브, 페이스북 등) 자녀교육 가이드, 헤이트스피치 방지법 등이 담긴 자료를 만들어 게재했으며, 이 자료들은 스웨덴어뿐만 아니라 영어, 아랍어 등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어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했다(Bjerregård, Jensen & Wadbring, 2017, Statens medieråd, 2018; n.d.). 이외에도 주변 북유럽 국가들과 협력해 가짜뉴스 관련 북유럽의회 미팅(Nordic Council of Minister's Expert Meeting on Fake News)을 열거나, 노르웨이와 공동으로 가짜뉴스 관련 인식 연구를 진행하는 등 나라 안팎으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Harrie, 2018b; Lundgren et al., 2018).

나가며

우리나라도 가짜뉴스의 피해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이에 가짜뉴스대책특별위원장이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박광온 의원은 지난해 4월 ‘가짜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허위조작정보가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민주주의를 퇴행시킨다고 주장하며, 허위조작

정보를 막기 위해 언론의 진실보도와 팩트체크 강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등의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러한 주장은 언뜻 스웨덴의 대응책과 비슷해 보이지만, 언론의 자율규제보다는 공적 규제 강화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김수언, 2019; 홍태화, 2019).

스웨덴의 사례를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를 위해 수호해야 할 귀중한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가짜뉴스로부터 자유로운 민주사회라는 공동목표를 가지고 정부뿐만 아니라 시민과 언론 등 사회구성원 모두가 개선의지를 가지고 협력하는 모습은 우리 사회가 갖추지 못한 모습이며, 가짜뉴스 사안이 정파간의 이해관계 대립으로 변질되어 버린 우리 사회에 상당한 시사점을 내포한다.

이제 우리 사회도 스웨덴 사회가 마주했던 동일한 질문에 답할 차례이다. 우리는 가짜뉴스에 대한 공적 규제 강화에 앞서서 여야간의 충분한 토론과 합의가 선행되었는가? 지속 가능한 민주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구성원간에 어떠한 협력을 했는가? 가짜뉴스에 대한 대비책은 정부와 국민간의 소통으로 세워진 결과인가? 이와 같은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던지며 고찰해봐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국민권익위원회 (2017). 스웨덴의 반부패시스템 성공 원인. URL: <http://acrc.imgwill.com/briets/201707/sub3>
- 2) 김덕식 (2018.9.5). 유럽 휩쓰는 반란민…스웨덴마저 덮치나. <매일경제>. URL: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8&no=560585>
- 3) 김수언 (2019.2.19). 박광온 "가짜뉴스 최대 피해자는 언론" 경기언론인클럽 초청 강연 <중부일보>. URL: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dxno=1328341>
- 4) 언론중재위원회 (2018). 2018년도 해외언론법제연구보고서. URL: http://www.pac.or.kr/_common/new_download_file.asp?menu=magazine&idx=962&field=pdf_nm
- 5) 옥기원 (2018.9.10). 불안 자극한 '난민 공포'…북유럽 복지국가마저 '극우 소환'. <한겨레>. URL: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861490.html>
- 6) 정아연 (2018.9.10). [글로벌 돋보기] "어젯밤 스웨덴에선 무슨 일이...". <KBS NEWS>. URL: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36591>
- 7) 홍태화 (2019.1.9). 文 "단호히 대처"…'가짜뉴스법' 탄력받나. <헤럴드경제>. URL: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0109000092>

- 8) Bell, F. (2018, August 28). Announcing Pop-Up Newsroom: Riksdagsvalet 2018. Medium. Retrieved from <https://medium.com/popupnews/announcing-pop-up-newsroom-riksdagsvalet-2018-cc219b6f6464>
- 9) Bjerregård, M.B., Jensen, O.R. & Wadbring, I. (September 29, 2017). Nordic Council of Minister's Expert Meeting on Fake News [Memorandum]. Copenhagen: Nordicom. Retrieved from <http://www.nordicom.gu.se/sites/default/files/bilder/memorandum.pdf>
- 10) Brattberg, E. & Maurer, T. (2018, May 31). How Sweden is preparing for Russia to hack its election. BBC. Retrieved from <https://www.bbc.com/news/world-44070469>
- 11) Carlsson, U., & Weibull, L. (2018). Freedom of Expression in the Digital Media Culture: A study of public opinion in Sweden. Nordicom.
- 12) Ericson, M. (2018). "Sweden Has Been Naïve": Nationalism, Protectionism and Securitisation in Response to the Refugee Crisis of 2015. *Social Inclusion*, 6(4), 95–102.
- 13) Eriksson, M. (2018, June 17). Riksdagspartier vill inte se lag mot falska nyheter. Sveriges Radio. Retrieved from https://sverigesradio.se/sida/artikel.aspx?programid=83&artikel=6977872&fbclid=IwAR3Epktb7IXfdZaujW2qikaBLFskMJplal_Xh3qDdQOH10gF46566AHZ4
- 14) Expressen. (Producer). (2019, March 2). Olofsson: M huvudansvariga för att alliansen sprack [online news article]. Retrieved from <https://www.expressen.se/nyheter/olofsson-m-huvudansvariga-for-att-alliansen-sprack/>
- 15) European Commission (2015). COUNTRY FACT SHEET: Sweden 2015 EUROPEAN MIGRATION NETWORK. URL: https://ec.europa.eu/home-affairs/sites/homeaffairs/files/what-we-do/networks/european_migration_network/reports/docs/country-factsheets/27a_sweden_country_factsheet_2015.pdf
- 16) Harrie, E. (2018a, June 4). European study: Large divergence in media trust. Retrieved from <https://nordicom.gu.se/en/latest/news/european-study-large-divergence-media-trust>
- 17) Harrie, E. (2018b, September 27) Three Nordic countries to increase MIL among all citizens. Retrieved from <https://nordicom.gu.se/en/latest/news/three-nordic-countries-increase-mil-among-all-citizens>
- 18) Hedman, F., Sivnert, F., Kollanyi, B., Narayanan, V., Neudert, L., & Howard, P. N. (2018). News and Political Information Consumption in Sweden: Mapping the 2018 Swedish General Election on Twitter. Data Memo 2018.3. Oxford, UK.
- 19) Kihlström, L. (2018, October 11). Faktiskt.se läggs ned. medievärlden. Retrieved from <https://www.medievärlden.se/2018/10/tiden-rinner-ut-for-faktiskt-se/>
- 20) Lundgren, P., Bjerregård, M. B., Hanson, N., Starum, K. L., Weihe, L., & Haugan-Hepsø, T. G. (2018). Fighting Fakes-The Nordic Way. Nordic Council of Ministers.
- 21) Mattsson, M. & Parthasarathi, V. (2018, September 26). A pop-up newsroom to fight fake news: a view from Swedish elections. The conversation. Retrieved from <https://theconversation.com/a-pop-up-newsroom-to-fight-fake-news-a-view-from-swedish-elections-103107>
- 22) Regeringskansliet (2016, December 2) Pioneering Freedom. Retrieved from <https://www.government.se/opinion-pieces/2016/12/pioneering-freedom/>
- 23) Regeringskansliet (2017a, February 23). Facts about migration, integration and crime in Sweden. Retrieved from <https://www.government.se/articles/2017/02/facts-about-migration-and-crime-in-sweden/>
- 24) Regeringskansliet (2017b, March 20). Så ska vi skydda valrörelsen från andra staters påverkan. Retrieved from
- 25) Reporters without borders for Freedom of Information (2018). 2018 World Press Freedom Index. Retrieved from <https://rst.org/en/ranking>
- 26) Revised Fundamental Laws for the Media" (2017/18:49). (2017). Retrieved from https://www.riksdagen.se/sv/dokument-lagar/dokument/proposition/andrade-mediegrundlagar_H50349/html
- 27) Southern, L. (2017, January 23). How Sweden is fighting fake news. Digiday. Retrieved from <https://digiday.com/uk/take-news-in-sweden/>
- 28) Statens medieråd. (2018, September 24). Digitala medier på föräldriska – YouTube. Retrieved from <https://statensmedierad.se/download/18.1c9447e165e34c02569d42c/1537361539540/Digitala%20medier%20p%C3%A5%20f%C3%B6r%C3%A4ldriska%20-%20YouTube.pdf>
- 29) Statens medieråd. (n.d.). Nohate – för dig som vill förebygga näthat bland unga. Retrieved March 3, 2019, from <https://statensmedierad.se/nohate,1295.html>
- 30) Surge in fake Twitter accounts spouting anti-immigrant bile sparks fears of outside interference in Swedish election. (2018, August 30). Independent. Retrieved from <https://www.independent.co.uk/news/world/europe/sweden-democrats-twitter-elections-interference-misinformation-immigration-a8514791.html>